

## 大學 設立 · 定員政策의 전망과 과제

金 潤 泰  
(西江大 教育大學院長)

### 1. 回 顧

우리나라 大學設立 및 定員政策의 變遷過程을 회고하면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단계는 8·15 해방 이후 1960년까지 대학에 대한 自由放任政策이 주도한 시기로서, 대학이 亂立하고 정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육 내용과 여건이 부실했고 무절제한 教育投資와 이에 편승한 일부 私學의 營利的 企業化 등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不信과 不滿이 고조되었던 때이다.

제 2 단계로는 5·16 이후 제 3 및 제 4 共和國이 끝날 때까지 국가 權力에 의하여 대학 설립과 정원이 강력히 통제된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기간은 1950년대까지의 自由放任政策이 초래한 不實私學, 대학교육의 質 低下, 高級人力의 流民化 등 교육적,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大學街에 새 질서를 가져 오기 위하여 대학에 대하여 강력한 統制와 監督을 단행하였던 때이다. 즉 1961년에 공포된 學校整備基準令에 의하여 대학 정비와 대학 정원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1965년의 大學學生定員令에 의하여 정원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法的 根拠를 갖기 시작한 大學定員 統制政策은 1970년대 大學改革事業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지속되었다. 대학 설립 및 정원이 억제

되고 완전히 국가 통제하에 들어감에 따라 1970년대에는 196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大卒者의 공급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 3 단계는 1981년 이후 大學의 擴大의 自律指向期로서, 이때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정원 통제에 발생된 高級人力 需給의 不均衡을 해소하고 再修生의 累積과 過熱課外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대학 정원 규모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었지만, 1981년에 단행된 卒業定員制度(1988년에 入學定員制로 환원됨)로 入學人員이 대폭 확대되었던 것이다. 제 6 共和國 출범과 더불어 自律化의 물결이 고조됨에 따라 1989 학년도 대학 및 정원 정책은 총 정원 규모 내에서 系列別로 대학 자체의 學科 調整이 가능해 짐으로써 어느 정도 自律化의 추세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 설립 및 정원 정책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文教部의 1989 학년도 및 1990 학년도 大學學生定員 調整指針에 의하면, 현재 정원 내에서 同一小系列 범위 안에서의 學科 設置·廢止 및 學科別 정원 조정과 夜間講座 개설 學科의 晝間으로의 전환만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자체 조정도 人文系 學科定員의 自然系 學科로의 전환을 권장하면서 인문계 대

자연계 비율이 점진적으로 4:6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이 과도한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여 尖端科學技術分野 學科로의 전환을 또한 권장하고 있다. 한편 增員이 우선 고려되는 학과는 基礎科學 및 尖端科學 등 自然系 學科와 國際化·開放化時代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에 한정하고 그것도 地方大學에 중점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大學 統制政策은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옴으로써 대학 정원의 과대한 증가를 억제하고 대학의 質 管理를 위하여 공헌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 설립과 정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自律力量을 위축시켰고 대학 발전을 제약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私學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지적된다.

筆者는 이러한 과거 경험을 되새기면서 향후 대학 설립 및 정원 정책에 관련된 변인을 展望하고 해결해야 할 課題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展 望

向後 大學設立 및 定員政策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未來를 展望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1) 大學教育의 大衆化

教育需要는 흔히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하나는 인구의 자연 증가 추세와 국민이 얼마나 교육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教育需要를 결정하는 社會需要 接近이요, 다른 하나는 산업 사회 발전에 필요한 人力의 質과 量에 맞추어 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人力需要 接近이다. 물론 이 두 가지 接近方式은 실제 절충되고 國際比較를 통해 補完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大學教育 需要도 대체로 위의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大學定員 統制政策으로 大卒者 공급 증가가 완만해지자 高級人力 需給의 不均衡이 초래되어 산업계에서 人力爭奪戰이 벌어졌으며, 한편에서는 再修生の 累積과 過熱課外로 여러 문제들이 과생되자 정부는 '80년대초

부터 大學定員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大卒者 供給規模는 그 需要에 비하여 과잉 공급됨으로써 高學歷失業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팽배한 學歷主義와 賃金隔差意識 및 企業의 高學歷者 選好慣行 그리고 中等교육 보편화에 의한 高卒人口의 波高와 국민 소득 상승 추세 등에 의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 조사에 의하면, 子女教育 水準이 대학 이상이기를 원하는 부모의 비율이 1977년에 아들의 경우 56.3%, 딸의 경우 33.6%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7년에는 각각 84.5%, 70.4%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문교 통계 및 인구 통계에 의하면 學制上 高等교육 적령(18~21세) 人口 중 高等교육 기관(放通大 제외) 就學者의 比率(就學率)이 1988년 현재 37%나 되어 우리의 대학교육은 이미 大衆化段階에 돌입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進學 希望率은 여전히 상승하여 60%를 초과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大衆化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大學教育 인플레이션 深化

'80년대 이래 大學教育 人口의 급격한 팽창으로 大卒者의 就業率은 매우 低調한 상태에 있다. 大卒者 중에서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可用人力 중 就業率을 보면 '75년 현재 71.8%에서 '89년에는 52.8%로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전체 失業者 중 大卒者의 構成比가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高學歷 失業問題가 심각해지고 있다. 즉 실업자 중 大卒者의 구성비는 '80년에 8.0%였던 것이 '85년에는 17.5% 그리고 '88년에는 23.2%로 크게 증가되었던 것이다.

大卒者 過剩供給은 失業問題만이 아니라 대졸자가 취업했다고 하여도 大學學歷을 요하지 않는 下位職種으로 이동 취업하는 현상을 파생시켰다. '60~'70년간, '70~'80년간 및 '80~'85년간 學歷別·職種別 就業者 數의 變化를 분석하여 보면, '60~'70년간 약 43.8만 명의 大卒(전문대 졸업 포함) 就業者 增加分 중 34.7%에 해당하는 15.2만 명이 대졸자의 전통적 취

업 직종이라 할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에 취업하였고 '70~'80년간 大卒 就業者 增加分 40만 명 중 63.4%에 해당하는 25.2만 명이 위의 2개 직종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80~'85년간에는 대졸 취업자 증가분 71.6만 명 중 34.6%에 해당하는 24.8만 명이 2개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0~'80년간은 大卒者 公需이 수요에 비하여 完滿하였지만, '60~'70년간과 '80~'85년간은 대졸자 과잉 공급으로 高學歷 인플레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新規 大卒者 중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 취업자 구성비를 보아도 감소 추세에 있어 '75년에는 56.4%였지만, '89년에는 47.3%로 줄어 들었다.

또한 大卒者의 就業職種은 專攻分野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大卒 可用人力 중 전문 분야에 취업한 비율은 '75년에 56.9%였던 것이 '85년에는 39.4%, '89년에는 38.1%로 줄어 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大卒者의 과잉 공급은 失業率의 增加와 下位職種 또는 專攻과 無關한 職種에 취업하게 하는 등 大學教育의 인플레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거니와, 앞으로 획기적 대책이 없는 한 高學歷 인플레 현상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3) 大學教育의 適切性 缺如

대학교육의 適切性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국가·사회적 실용성과 효율성에서 본 적절성과 개인의 욕구와 필요의 차원에서 보는 개인적 적절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전자의 적절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다. 그것도 産業社會에서의 대학교육의 실용성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産業界가 요구하는 高級人力의 質 水準과 대학이 양성한 고급 인력 질 수준과는 격차가 심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1988년 11월의 韓國科學技術院 조사에 의하면, 대학에서 배출된 과학 기술 인력이 “量的으로는 부족하지 아니하나 優秀 人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총 333개 기관 중 78.2%나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향후 尖端技術産業 및 資本集約的 産業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養成體制로는 미흡하다. 대학 및 대학원에 첨단 기술 분야 학과가 부족하고, 大學 定員管理의 硬直性 및 전공 계열별 定員構成의 不均衡 때문에 대학은 고급 인력 수요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를 담당·지도할 教授陣이 부족하고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또는 낙후 현상 등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산업 사회의 급속한 技術變化로 大學 教育課程은 낙후되고 적절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교육과정 編成·運營의 柔軟化를 통해 산업 사회의 요구를 신축성 있게 수용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적절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4) 大學教育의 秀越性 強調

대학교육 기회가 개방되고 대학교육이 대중화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秀越性이 희생당하는 것이다. 대학이 量的으로 크게 팽창하고 대중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量的 擴大에 급급하고 質的 發展은 소홀히 한 탓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교육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였고 대학교육에 대한 社會의 不信도 매우 컸다.

사실 私立大學 가운데에는 教育與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不實私學으로 전락하거나 零細性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大學의 主要財源이 학생 納入金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나 통제 없이 우선 대학 간판만 달고 학생 모집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定員 擴大政策을 기대하는 한심한 사학도 있었다. 量的 擴大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기에 너무나 심각한 현상이다. 이러한 전통(?)은 불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質的 向上보다는 量的 擴大에 치중하려는 오늘의 대학 현실 속에도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향후 국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尖端技術產業이 지배하는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國際競爭力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教育의 秀越性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가 탁월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유용하도록 대학교육의 質向上 또는 內質化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量보다는 質의 향상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앞으로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學問的 秀越性을 유지하고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교수의 확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현대적 교육 시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갖추며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교수의 研究活動 등에 行·財政的 支援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大學의 自律性 要求 增大

해방 후 1960년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開放의 放任政策으로 대학은 급격히 成長하였으나, 自律力은 크게 위축되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즉 대학의 急成長 과정에서 일부 대학은 公共性을 무시하고 自己規律·自己統制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他律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自治能力을 갖지 못하고 他律的 機關으로 존재하거나 自律的 運營能力을 배양하지 못한 채 타율과 통제에 안주하려는 성향마저 보였다.

1960년대 이래 大學定員 統制政策은 1950년대까지 自由放任期에 빚어졌던 대학교육의 非正常化와 일부 私學의 不條理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의 大學狀況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大學體制 내외의 환경이 '50년대와 같은 學園의 不條理를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제 6共和國 출범과 더불어 사회의 각 부문에는 自律化·民主化의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율과 자유 속에서 自我實現과 創意的 活動을 추구하며, 집단과 조직체에 있어서도 自律 속에서 潛在的 可能性과 創意力을 발휘해 나갈 것을 理想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民主社會의 大學은 더더욱

自律性 伸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 나라의 최고 知性人의 공동체인 大學社會의 자율화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 그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自律性 伸張은 크게 요청될 것이다.

## 3. 課 題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未來를 展望할 때 향후 大學設立 및 定員政策에 관련된 課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1) 大學教育 體制의 多樣化

1988년 현재 4년제 大學校 數는 115개가 되고 在學生 數는 100만 명이 넘는다. 고등교육 就學率도 37%나 되어 Martin Trow의 고등교육 체제 분류 방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는 확실히 大衆化 단계에 있다. 학생 집단은 異質化·多樣化되었으며 대학교육의 성격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 우리의 대학은 精選된 우수한 학생들만 다니던 종래의 엘리트 대학체제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집단을 감안하고 그들의 發達課業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大學機能에 대해서는 보통 研究·教育·社會 率任 등을 들고 있다. 엘리트 단계의 대학에서는 하나의 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양한 수준의 대학이 위의 기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결국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면 교육의 질적 수준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大學(課程)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需要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향후 大學教育의 社會的 需要가 줄지 않고 대학교육의 大衆化가 촉진될 것을 전망할 때 量的 統制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大學 및 大學課程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접근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특징의 하

나인 子女教育熱을 승화시킬 수 있는 高等教育의 開放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大學教育의 自由競爭體制 確立

우리나라 大學間 教育의 質的 隔差가 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企業이 세칭 一流大學, 人氣學科 출신 위주로 고용하고 있으며, 地方大學 출신자보다는 서울所在 大學 출신자를, 그것도 특정 대학 출신을 選好하는 현상은 大學間 隔差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유사한 學科를 설치하고 特性化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外觀上으로는 大學教育임에 틀림없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質과 教育與件 등에 있어서 대학 간에는 격차가 심하다.

이제 대학간에 教育競爭을 할 수 있도록 統制보다는 自律性을 대학에 대폭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改革審議會의 大學 定員政策의 改善方向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려는 정부의 대학 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대학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정원의 自律化를 지향하되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정부가 정원을 책정하는 권한을 양보할 것같지 않다.

최근 大學教育協議會가 試圖하고 있는 大學評價認定制度和 같은 제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의 自律的 協議機構에 의한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전문적 판단 및 자율적 협의를 통해 대학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관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대학 관리·운영이 건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책정 및 자원 확보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각 대학이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시설·도서 등 교육 조건의 정비 정도에 따라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중화 단계에 있는 다양한 고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의 질과 형태의 선택은 수요자의 능력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학간 자유경쟁 체제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학교육의 秀越

性과 平等理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大學教育 人口의 適正調整

대학교육의 총 정원 규모는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社會的 需要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대학교육에 自由競爭體制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尖端技術產業 人力需要에 대비하는 大學 및 學科의 新設과 定員擴大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의 學部課程은 自然系(理·工系) 중심으로, 大學院 課程은 기초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전자,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위주로 學科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新·增設도 고급 인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계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신규 대학은 기초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로 신설하되, 大企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教育投資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 투자가 비교적 크게 요구되는 기초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는 國·公立大學 중심으로 확대하되, 教育與件이 우수한 私立大學도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정원 配分에 있어서 地域間 大學接近 機會가 균등하게 실현되도록 하며, 地域社會의 產業의 特性에 부응하는 학과 또는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거나 첨단 기술 분야 중 특정 專攻學科 중심의 地方大學 特性化를 위하여 중점 지원·육성하는 정책이 좋을 것이다. 또한 대중화된 대학교육 체제에서 증대하고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학교육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교육 체제를 개발하고, 계속교육 차원에서 개방형 고등교육 기관(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확충하여 정원 규모를 확대·배분해야 할 것이다.

個別大學의 定員規模는 대학의 성격과 유형 그리고 교육 여건·성숙도에 따라 조정하되, 규모가 과대한 대학의 증원은 억제하고 규모가 영세한 대학은 최저 운영 단위 규모가 되도록 증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大學設立과 增員의 合理化

대학 정원의 增員·增科 또는 大學 新設基準에 대하여 一線大學들은 궁금한 것이 많다. 매년 대학생 정원 조정 지침을 각 대학에 통보하지만, 발표되는 결과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私學財團이 대학을 설립하려면 教育用 財産을 갖춘 후 收益用 財産을 구비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용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용 재산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인가를 받음으로써 학생 등록금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政治的 壓力에 의하여 대학 설립이나 증과·증원이 결정된 경우도 있어 정원 정책 및 대학 설립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때도 있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公約에서 또는 정당마다 黨利黨略의 수단으로 특정 지역의 대학 설립을 논하기도 하였다. 首都圈 地域 人口 억제 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을 동결하여 오다가 政治的 變革期에는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 증원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1980년 소위 國保委가 발표한 教育正常化 및 過熱課外解消方案에 의하여 교육 여건이 비교적 좋은 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81 학년도 대학 정원이 대폭 증원되었고, '88 학년도 入試에서는 卒業定員制가 폐지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도 입학 정원이 증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인구 억제책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억제하였던 정원 정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하여 전환되었던 것이다.

향후 大學設立이나 定員政策은 教育外的 要因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自主성과 政治的 中立性을 실현하며 교육적 요인에 의하여 대학 설립 및 정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것도 專門家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교부가 1990학년도 大學新設 認可를 결정함에 있어서 教育專門家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신청한 대학의 設立 妥當性を 평가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발전적인 조치라 하겠다. 이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평가 영역의 요점은 ① 學校 設立者의 자질, ② 學校法人의 재산, 대학에의 기여

도, 임원진 구성, ③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등 教育環境, ④ 設置學校 학과의 기존 대학과의 비중복성, 설립 취지 및 기대 효과, 기타 설치될 대학의 교육 여건, ⑤ 전문직 종사자, 고등교육 인적 자원, 지역 개발 수준, 지역 발전 전망, 지역적 특수성과의 연계성 등 地域環境에 관한 사항들로 되어 있다. 이들 평가 영역 및 구체적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대학 신설의 지침이 된다면 그만큼 대학 설립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이며 대학 설립을 에워싼 잡음도 없게 될 것이다.

#### 4. 結 言

우리나라 大學定員 規模나 大學設立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妥當性이 합리화되어 왔다. 하나는 대학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인구의 증가로 결정된 社會的 需要이며, 또 하나는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의 규모로 결정된 人力需要가 그것이다. 정부는 1960년대초부터 이들 두 요인을 적절히 조화시켜 대학 정원 규모를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定員政策을 시행하여 왔다. 사실 대학 정원 정책은 대학교육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하나의 통제 수단이다. 따라서 대학 정원 정책은 대학 운영의 정상화와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교육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 정원 정책은 一貫性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하였고, 대학교육 체제 내외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學歷主義, 임금 격차 의식, 기업의 高學歷者 選好慣行, 高卒者 人口의 波高, 국민 소득 상승, 進學 위주의 高교 교육 등으로 대학교육 수요는 계속 확대되어 大學教育의 大衆化가 촉진된 것이다. 따라서 人力需要에 비하여 大卒者가 과도하게 대량 배출됨에 따라 大卒失業, 下位職 취업, 專攻과 무관한 취업 등 대학교육의 인플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풍부한 人力 중에서 필요한 人力難이라는 역설적 현상은 특히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부족한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尖端技術産業이 지배하게

될 未來社會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의 秀越性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앞으로 대학이 그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의 自律性 신장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이처럼 대학 설립 및 정원 정책과 관련시켜 대학교육의 未來를 展望할 때 향후 政策課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로 大學

敎育體制의 多樣化를 통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大量의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둘째로 大學敎育의 自由競爭體制를 확립하여 대학교육의 秀越性和 平等理念을 구현하며, 셋째로 大學敎育人口의 適正調整과, 넷째로 大學設立과 增員의 合理化를 통해 大學設立과 學科 增設 및 增員의 타당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